

2002. 3. 15(金)

제4회 한경연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제1주제 : 수출회복전망과 2002년도 우리경제의 성장전망 ·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 제2주제 : 중국의 10.5 산업부문 경제계획과 한국경제 · 박승록 선임연구위원

수출회복전망과 2002년도 우리경제의 성장전망

1. 문제제기

- 국내상황은 가계심리지수 및 기업체감경기지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에서 올 우리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o 이런 분위기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고 아울러 건설부분이 작년말 이후 호조를 보이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음. 이에 덧붙여 앞으로 실시될 각종 선거 및 월드컵 경기 등이 향후 경제활동의 급속한 활성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도 크게 작용하고있음.
-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우리의 총수요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음. 이런 기본적 구조하에서 수출회복은 우리경제가 지속 가능한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수출의 향방이 단순히 경기회복시점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 경기 활성화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만약 전적으로 내수에 의존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다가 수출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인다면 이는 바로 경기과열로 연결될 수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수위주의 경기회복의 현실성 및 관련되어 예상되는 정책적 문제점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수출시장

인 미국경기의 추이, 특히 우리 수출과 관련 있는 미국의 수입수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올 우리수출의 전망을 짚어봄.

- 아울러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인상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끝으로 작년 말 보다 양호해진 내수 및 하반기 수출회복전망을 일부 반영한 수정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2. 전적으로 내수에 의존한 5% 성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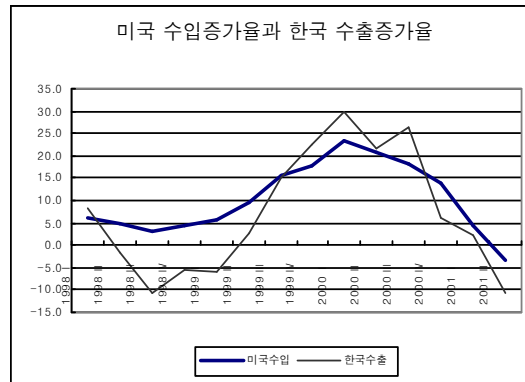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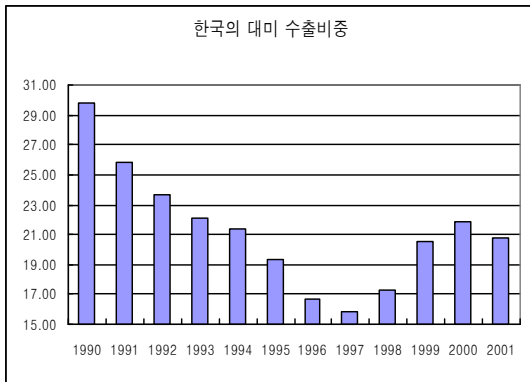
- 최근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는 그 동안 소비가 지속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고 아울러 건설부분이 작년말 이후 호조를 보이는 것에 바탕을 두고있음. 하지만 2002년에 들어서도 아직까지 수출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5% 이상의 성장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내수신장이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음.
 - o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본원의 작년 12월 발표한 예측치를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 한경연은 작년 12월에 올 성장 전망치를 3.6%로 발표.
 - o 본원의 추정에 의하면 수출과 투자의 가시적인 회복이 없이 전적으로 소비의 성장에 의존하여 5% 성장목표를 달성하려면 소비가 7.0% 이상 증가해야함.

- 2001년 연간 민간소비증가율은 (4/4분기 전망치를 포함) 약 3.0%로 추정됨. 2000년 민간소비증가율은 7.1% 이었는데 당시 실질 GDP는 8.8% 성장률을 보였음. 2000년에는 고정자본형성과 수출이 각 11.0%와 21.5%의 강한 증가세를 보여서 가계 소득의 빠른 증가를 가능케 하였고 이는 2001년 소비의 견조한 증가로 연결되었음.
- 이에 비해 2002년에 투자와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소득 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o 생산증가를 통한 소득증대 없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려면 자산가격의 상승을 통한 正의 자산 효과 (positive wealth effect)가 있어야함. 하지만 경제 기본체질 개선과 확실한 경기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자산가격 버블 형성으로 연결 될 수 있음.

3. 미국 경제회복 속도와 2002년 한국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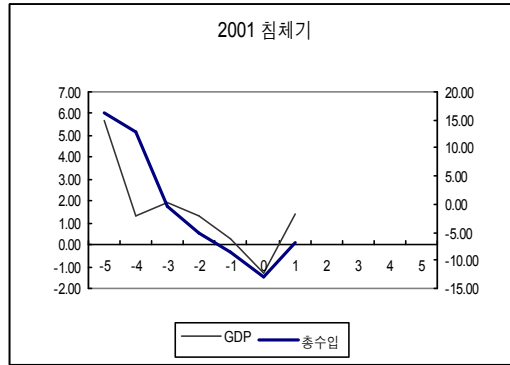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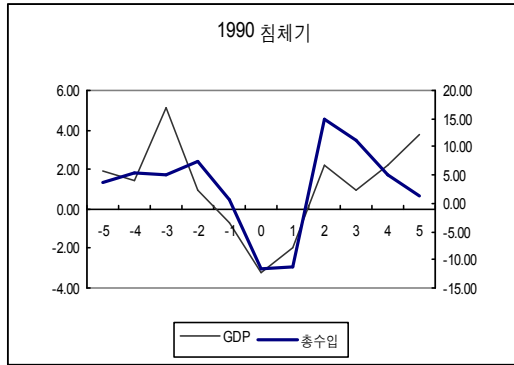
-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던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내수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
- 그러나 GDP에서 50%를 넘는 비중을 갖는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수출추세는 우리 경제의 회복정도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임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대미수출의존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미국의 수입증가율의 동조화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수입수요 전망은 우리 수출의 회복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됨



- 통상적으로 수입수요는 한나라 전체의 소득지표인 GDP와 높은 정(正)의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 미국 데이터의 경우도 이를 보여줌. 따라서 미국의 수입수요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지는 미국의 GDP 성장속도에 좌우될 것임
- o 2001년 3월*에 시작된 침체기와 이번 침체기 직전의 1990년 침체기를 살펴보면 미국의 수입수요증가율이 미국의 GDP 성장률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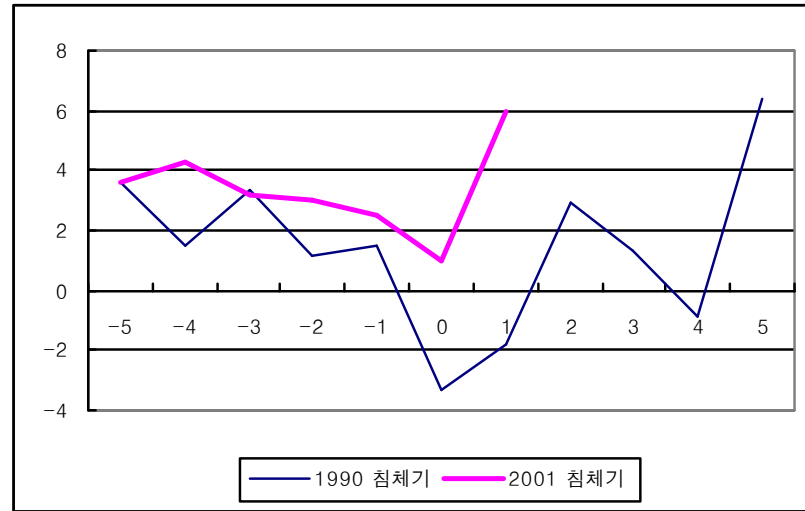
* 작년 11월 26일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미국경제의 침체가 2001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고 공식발표



주: 1990년 침체기의 경우, 횡축의 수치 0= 90년 4/4 분기이며 나머지는 분기시차
 2001년 침체기의 경우, 횡축의 수치 0= 2001년 3/4분기이며 나머지는 분기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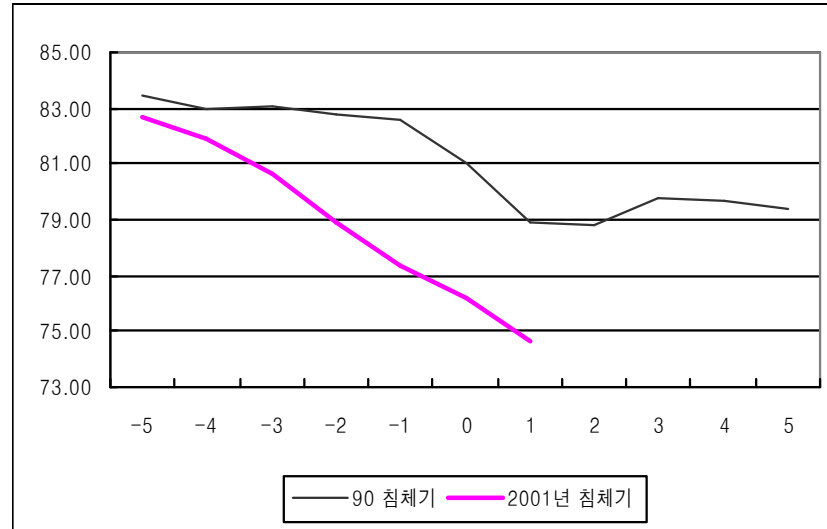
- 이번 침체기의 민간소비와 가동률 수준을 볼 때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는 과거보다는 크게 완만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수출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o 우선 미국GDP의 약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과거 90년 침체기와는 달리 2001년 경기침체기에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소비의 추가적인 큰 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이번 회복세가 완만하리라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음.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비교



- 반면 이번 침체기에는 투자의 위축이 두드러졌음. 따라서 강한 회복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왕성할 것인가에 달려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가동률이 90년 침체기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업 투자 전망은 아직 크게 낙관적이지 않음.

전산업 가동률 비교



-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은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증가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예상되는 수출회복세도 완만할 것으로 보여 연간 수출증가율은 2%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2002년 우리경제는 하반기 이후 수출이 강한 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연간 5.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

2002년 주요 경제지표전망

단위: 전년 동기비(%), 억달러(국제수지 항목)

	2000년	2001상	2001하	2001년	2002상	2002하	2002년
국내 총생산	8.8	3.2	2.6	2.9	3.9	5.3	4.6
민간소비	7.0	1.9	3.8	2.9	4.6	4.6	4.6
설비투자	34.1	-9.3	-7.6	-8.5	2.9	7.5	5.1
건설투자	-4.0	1.1	9.0	5.5	5.8	1.1	3.1
소비자 물가	2.2	4.7	3.8	4.3	3.0	3.9	3.5
경상수지	122.4	65.3	20.9	86.1	24.8	10.5	35.3
수출	1759.5	792.9	720.8	1513.7	751.4	783.3	1534.8
증가율 (%)	21.2	-7.4	-20.2	-14.0	-5.2	8.7	1.4
수입	1590.8	710.0	669.8	1379.8	703.7	746.6	1450.3
증가율 (%)	36.2	-9.6	-16.9	-13.3	-0.9	11.5	5.1

4. 정책시사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회복이 동반되지 않고 내수에만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큰 폭의 소비증대를 전제로 하여야함. 단기 간에는 주가와 부동산 등 일부 자산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소비가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나 만약 수출과 투자의 동반 상승이 지연된다면 소비의 지속성장이 어려움.
- 정책입안 차원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소비증가를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하는 정책에는 문제가 있음. 생산활동 증가를 통한 소득증대 없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려면 자산가격의 상승을 통한 正의 자산효과 (positive wealth effect)가 있어야함.

- 하지만 경제 기본체질 개선과 확실한 경기진작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물가불안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버블 형성으로 연결 될 수 있음. 따라서 자산가격상승을 거시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렇게 본다면 향후 소비 증대에만 의존하여 5%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특히 이를 위해 거시정책이 지금보다 팽창적으로 운용된다면 무리한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 특히 올 하반기에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본격화된다면 과열된 소비와 더불어 총수요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적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경제가 2001년 경기불황을 본격적으로 겪으면서 거시정책이 약하나마 경기 진작을 염두에 두어 운용이 되어왔음. 만약 올 하반기에 총수요급등이 발생하여 경기회복이 시작되어 채 1년도 되기 전에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사태가 전개 될 경우 빈번한 거시정책전환에 따른 정책일관성의 결여 등과 문제점이 부각될 것임. 현시점에서 거시정책기조가 팽창 쪽으로 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동시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주가 상승 등 자산가격상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금리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음.
- 첫 번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은 속단하기 어려움. 특히 향후 노조의 강성투쟁이 재연될 경우 기대되는 경기회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지금까지 가시적인 물가상승압력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과급효과가 선별적이지 않고 광범위한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마치 벼룩 몇 마리 잡기 위해 초가를 태우는 것과 유사함.

-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의 경우 실제로 일어나는 각 거래단계에서 거래차익에 대해 정확히 과세를 한다면 가격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것임. 국지적이고 투기성향의 탈세거래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거시정책을 동원한다는 것은 적절한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잘못된 주장임.
-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팽창이나 긴축에 기울임이 없이 확실히 안정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기조의 조정은 올 2/4분기 말이나 3/4분기 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시점에서 정부정책의 초점은 올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위기를 틈타 이익집단들이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것을 막는데 두어야함. 월에 있었던 노동쟁의에서도 보았듯이 앞으로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으며 경기회복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하지만 정부가 단순히 회유와 무마로 집단행동을 방지하려 한다면 중,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소지가 큼.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유도와 함께 불법행동에 대한 현행법의 엄중한 집행이 보다 바람직함.
- 아울러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이 제한적인 시점에서 내실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욱 절실함. 이를 위해서는 對기업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함께 글로벌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선과 규제철폐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참고> 2002년 경제전망(2001년 12월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 총생산	8.8	2.5	2.6	2.8	3.2	3.8	4.6	3.6
(제조업)	15.3	1.8	1.6	2.5	3.5	4.3	6.3	4.2
총소비	6.2	4.2	2.6	3.6	3.5	3.4	3.6	3.5
민간소비	7.1	4.6	3.0	3.8	3.7	3.8	4.2	3.9
고정자본형성	11.0	-3.5	-3.7	-1.7	1.3	4.7	5.9	2.7
설비투자	34.1	-14.3	-12.0	-7.4	-2.7	6.1	9.0	0.8
건설투자	-4.0	4.1	3.8	4.7	4.5	3.8	4.0	4.2
총수출	21.5	-3.6	0.1	-1.2	0.4	4.6	4.9	2.2
총수입	19.9	-4.2	-4.5	-1.6	3.3	6.1	10.0	4.5
생산자 물가	2.0	1.0	2.2	0.9	0.8	1.3	1.8	1.2
소비자 물가	2.2	3.3	4.3	2.9	2.6	3.0	3.5	3.0
경상수지	114.0	18.6	95.6	21.8	13.9	9.9	8.1	53.6
상품수지	168.7	36.4	151.9	31.6	26.1	27.6	25.9	111.0
수출	1759.5	371.7	1528.1	374.5	380.5	389.0	399.5	1543.6
증가율 (%)	21.2	-17.2	-13.1	-7.9	-1.7	7.2	7.5	1.0
수입	1590.8	335.3	1376.2	343.0	354.5	361.5	373.7	1432.6
증가율 (%)	36.2	-17.4	-13.5	-7.8	5.5	8.6	11.5	4.1
서비스+소득+이전수지	-54.7	-17.8	-56.2	-9.8	-12.2	-17.7	-17.8	-57.4
원화 환율, 기말 Won/\$	1259.7	1265.0	1265.0	1256.0	1247.0	1238.0	1230.0	1230.0
회사채수익률(평균, 연%)	9.4	7.2	7.2	7.4	7.6	7.9	8.1	7.8
세계교역량	12.4		1.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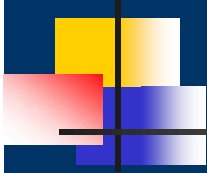
중국의 10.5산업부문 경제계획과 한국경제

박승록
psr@kerl.org
<http://parksr.net>

20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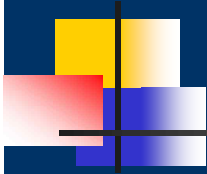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1. 목표와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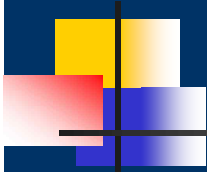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

- 향후 5-10년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
-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 세계적 산업구조조정
- 중국의 경제적 구조조정 및 개혁 필요
- WTO 가입
- 국민경제에 유리한 외부조건의 조성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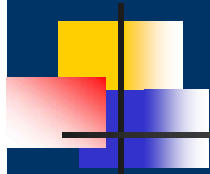
- 질적, 양적 경제성장
- 성숙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달성
- 대외개방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 생활수준의 개선
- 과학기술 및 교육사업의 발전
- 국민의 능력 향상
- 민주적 법제도화 추진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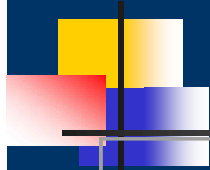
- 고도성장의 지속
- 구조조정의 추진
- 개혁개방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
- 시장경제체제의 작용 원활화

II. 산업부문 계획내용



10.5계획 산업부문 대상산업

- 자동차
- 기계
- 철강
- 금속
- 건축
- 방직
- 경공업
- 석유화학
- 화학
- 석탄
- 의학
- 전력
- 첨단기술산업



주요 산업의 육성계획 내용

첨단기술 산업

첨단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 구축- 전자집적회로- HDTV 시스템- 제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표준의 신속한 제정· 외국회사와 적극적 합자추진· 제3세대의 이동통신의 핵심기술 장악 및 산업화 추진· 제3세대의 시스템 설비 및 핸드폰 생산규모 확대· 제3세대의 이동통신 운영실험 진행 및 상용화 실험 실시· 세계 주류기술로 된 제3세대 이동통신망과 산업체계의 형성- 라디오-TV위성 생중계 시스템- 고속철도 기술 - 신형 비행기 - 생명공학기술 - 현대적 농업기술- 석탄액화제유공정 - 선박디자인 기술 - 청결탄 기술

중점
육성
분야

- 소프트웨어 산업
- 전자상거래
- 보안정보 시스템 및 관련 제품
- 디지털 전자제품
- 신형 반도체 부품
- 신약
- 신 한약
- 미세전자, 광전자재료
- 신물질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 제조업의 정보통신화의 가속화
- 인터넷화 제조공정
- 공장 자동화
- 디지털공제 시스템과 그 장비
- 선진적인 환경보호산업
- 축전지 - 청결형 연료 자동차
- 소위성 - 위성응용 - 막기술 응용 산업

정책
조치

-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마련
 - 지적소유권 평가와 거래체계 형성
 - 중소기업 서비스체제 가동
 - 표준적인 기술관리체계 · 체제개혁과 시장환경의 조화
-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지역정책에서 국가적 산업정책으로 변화
- 정책대안의 활용도 증대 및 정부의 사업 서비스 질 제고
 - 주요 산업영역에는 전문적 계획을 도입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 국가계획수행에서 직능간 협조 원활화를 위한 조직개편
 - 창의력있는 기업 네트워크 구성 · 세무행정의 완비
 -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법률제정 · 첨단기술의 국가채용 정책
-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융자체제 완비
 - 정부투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제고
 - 광범위한 투자자금 유치 · 첨단기술상품에 대한 수출융자체계 구축
- 인재육성
 - 인사제도 개혁, 첨단기술분야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방정책 실시
 - 출입국관리제도, 거류제도 변경 해외고급인력 유치
 - 능력급 보수체계

자동차 산업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쟁력있는 2-3개 대형 자동차그룹 형성(70%) - 승용차 비중 확대 - 제품의 안정성 확대 - 2-3개 자동차 개발센터 건립 자체 개발력 향상 - 기술력 확보 - 선진국과 제휴 및 국제간 기술연계 강화
중점육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급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 제품인증 검측 실험시설 개발분야 - 경제형 승용차 - 중형 화물차 - 대 중형 화물차 기술개발 분야 - 신형자동차 엔진개발 - 안전장치, 배기정화, 자동변속장치
정책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시장 건전화, 개인용차량 증가에 대비한 조세정책, 중고차 시장 - 법제화 관리 - 대형기업 형성 - 자체개발력 강화 - 부품산업의 발전 - 대외합작 강화 - 관련산업분야의 발전

석유화학

	<h2 style="text-align: center;">석유화학</h2>
<p>정책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단행 - 정유능력 확대와 경쟁력 제고 - 에틸렌 산업 육성 - 기술혁신 - 시장의 규범화 - 석유대국에서 석유화학강국 건설
<p>정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 국내외 자원의 병행 사용 - 종합적 경쟁체제 형성과 과학기술 발전 - 석유화학공업의 핵심기술 확보로 전통산업 개조 - 에너지, 물자절약 및 환경보호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달성(구형설비도태, 수입원유기지건설, 소규모100만톤급 이하의 정유회사 도태) - 시장화와 제품의 질 제고 - 환경보호중시 - 원유유통 및 자원배치 조절 - 기술력 제고
업종별 정책 목표	에틸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장비 개조 - 에틸렌 공업기지 건설 - 에틸렌 품질제고 - 대형 합자항목 증대 - 국산화와 기술혁신 추진
	합성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생산량 증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 구조조정 - 선진기술 도입과 국산화 실현
	합성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R/부타디엔고무의 생산증대 - 제품별 발전계획 수립 - 시장수요에 맞는 표준체계 형성
	합성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1-2급 정도의 대형기지 건설로 석유원료산업 발전 - 폴리에스터 설비 집중도 제고 (대형기업 기술혁신, 중형기업 및 합자기업 증설, 소형기업 도태, 신규진입 불허) - 외국기업 신기술 활용 아클릴로니트릴 생산설비 건설

<p>업종별 정책 목표</p>	<p>유기 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개발 - 유기원료기지 건립 - 유기원료 기술수준 강화
<p>정책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 강화 - 국제화 - 심사비준제도 강화, 자금도입경로 확대 - 산업분포조정과 자원배치의 효율성 - 신기술 도입으로 개발능력 제고 - 석유자원공급의 안정성 확보 - 시장질서의 규범화 - 에너지절약 	

기계산업

정책
방향

- 생산과 소비분야 생산자료 규모 확대
- 기계설비 수입대국에서 수출강국으로 전환
- 시장경쟁력 강화

정책
목표

- 향후 5년간의 성장속도 및 수출목표 달성
- 기술구조 목표
 - 향후 5년간 기계설비의 공급 자국화 실시
 -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 · 낙후된 기계부품 기술력 향상
- 경쟁적인 생산조직체계를 형성
- 중점구조 조정분야
 - 핵심기술 도입 · 기계와 전기의 일체화 추진 · 디지털기술 채용 확대
- 중점 발전 분야
 - 기술장비 분야 · 자동차 산업 · 농업장비 · 기초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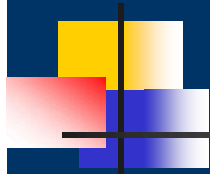
정책
과제

-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
- 시장범위 확대
- 중복투자 방지
- 대형 기업그룹 형성
- 중요설비의 본지화 추진
- 농기계, 중형 기계설비에 대한 정책지원
- 낫은 제품에 대한 도태체제 도입
- 기술력 개발 지원
- 우수한 인재 육성

철강산업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장단계로 전환 - 지역적 분포 조절 - 부품개발과 경쟁력 제품 육성 - 기술력 제고 - 정보화 기술 적극 도입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 제품품질 대대적 제고 - 에너지 소비 절감 - 환경보호 중시 - 용수 절약 -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 - 생산집중도 향상
자원 외 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광석자원 분포의 합리화 - 폐광자원 재활용 - 에너지 소모절감 기술 적극 도입 - 수력자원 확보 - 중복투자 방지 - 대형 전문부두 건설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적 조정정책 실시 - 표준화 시장관리체계 형성 - 법제도 강화 - 감세제도 및 낙후 증세제도 도입 - 외국기업과의 제휴 강화 - “청결생산”정책 추진 - 자원이 고갈된 철광산 파산 또는 폐쇄 - 철광석원자재 부족 기업의 외국기업과의 제휴 추진 - 구조조정 추진 - 새로운 과학기술체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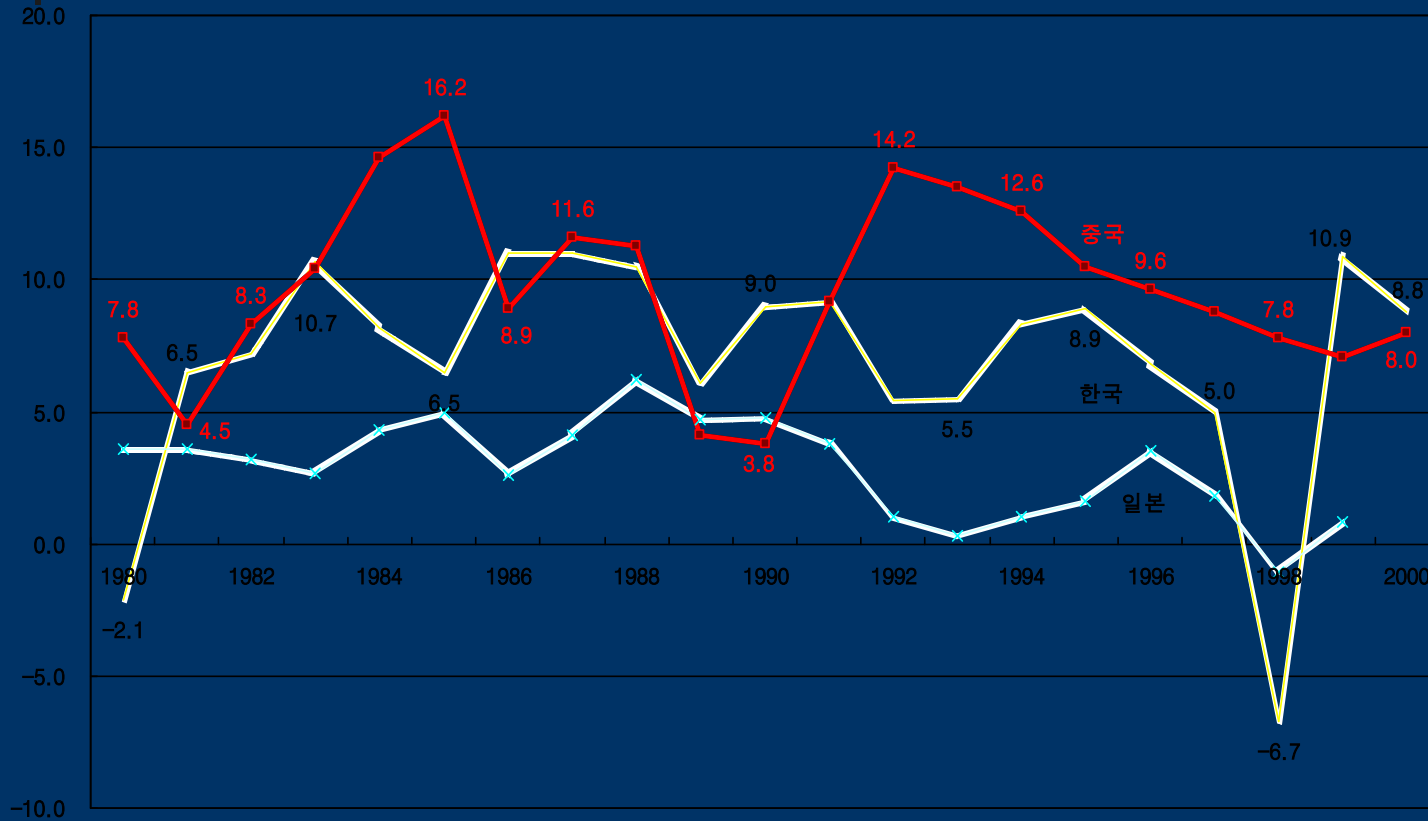
III. 한국경제에 대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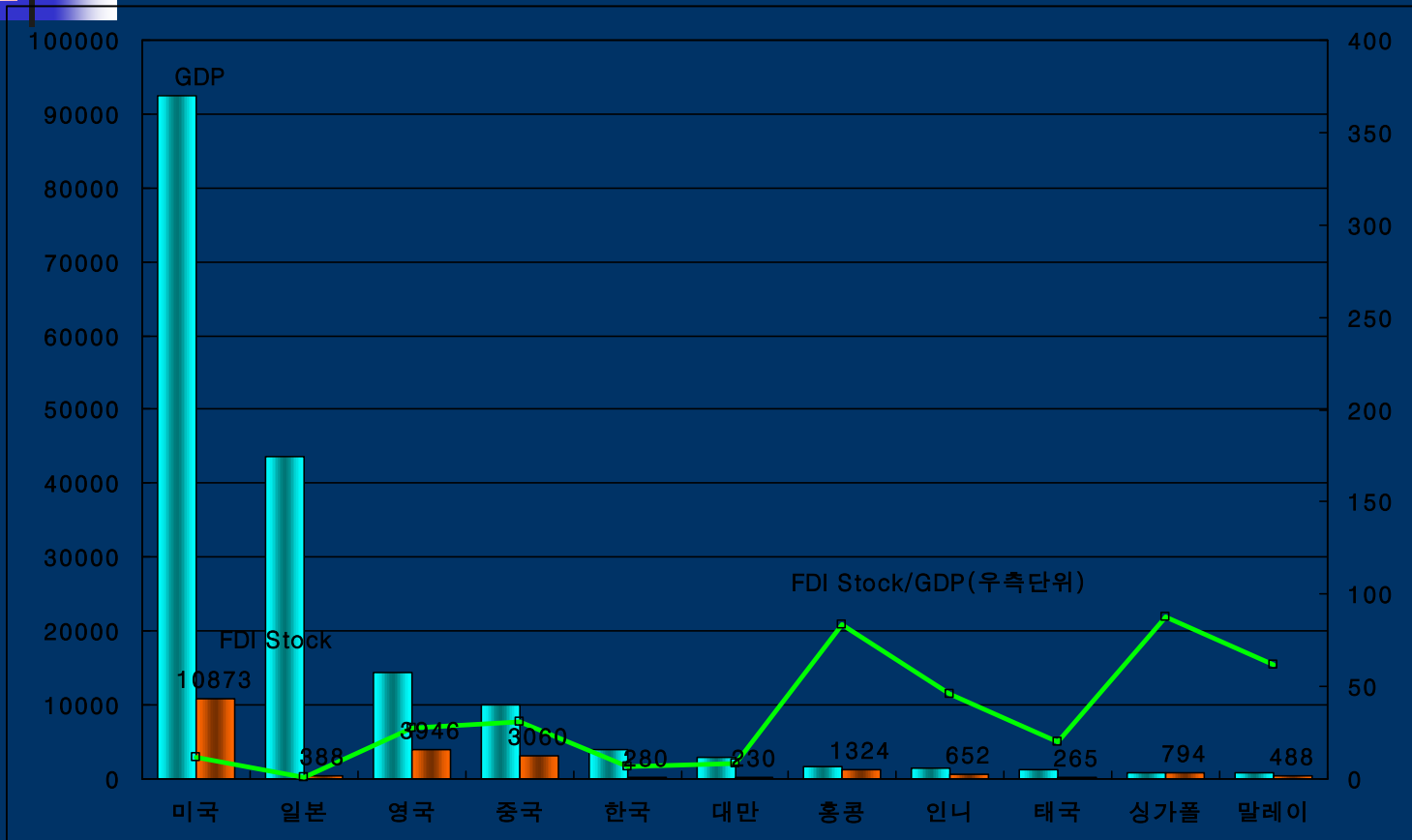
(1) 고도성장과 경쟁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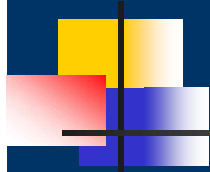
-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 도농격차, 서부대개발, 질적 양적 고도성장추진
 - 전형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패턴
- 지속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병행
 - 서부대개발, 올림픽관련 대규모 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 확대 유도
 - 투자확대, 내수 및 수출확대에 기여
- 규모의 경제효과를 대폭 활용
- 지속적 고도성장과 한국의 지속성장에 대한 위협

한·중 인당 국민소득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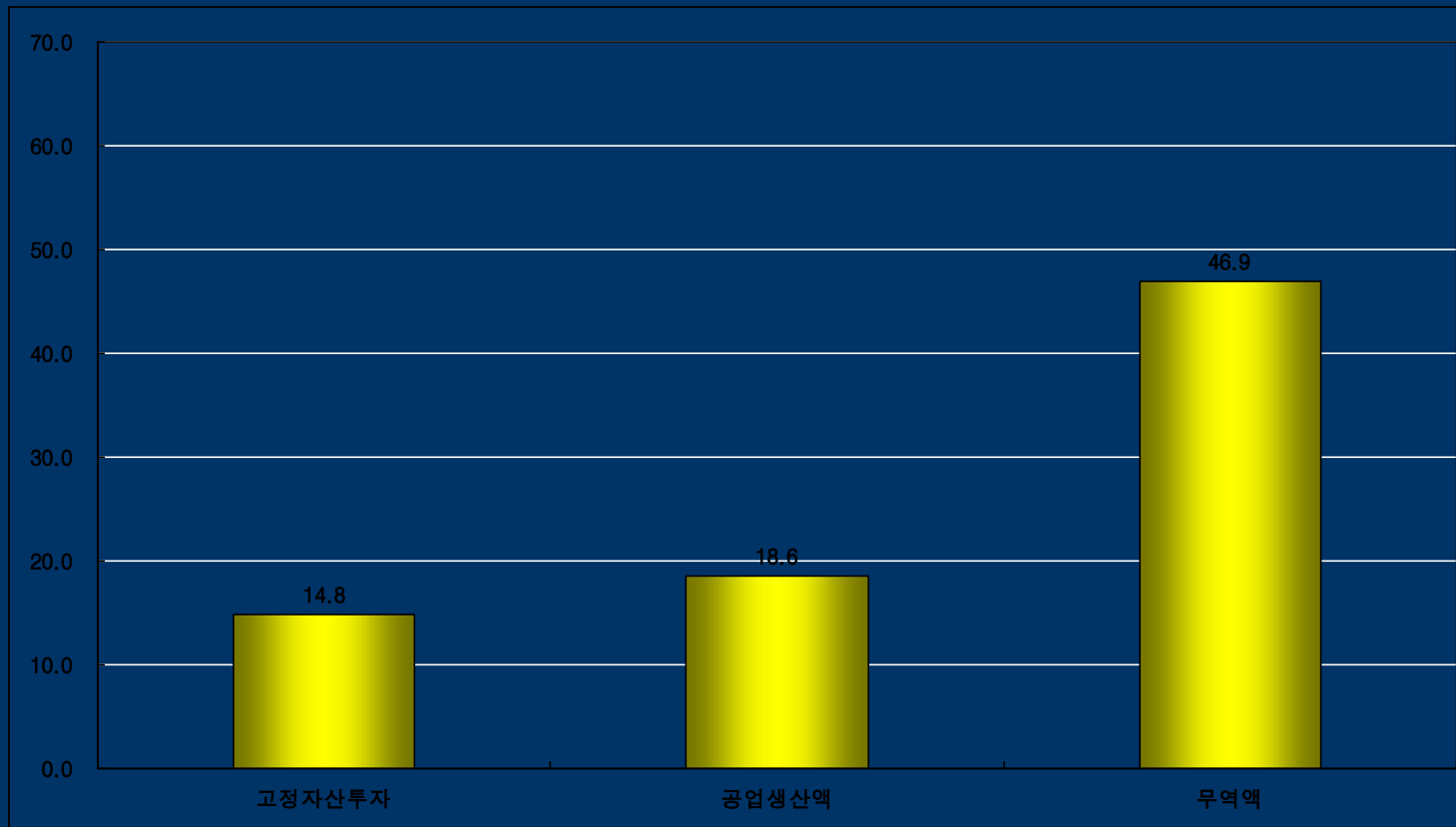


국별 대중국 투자누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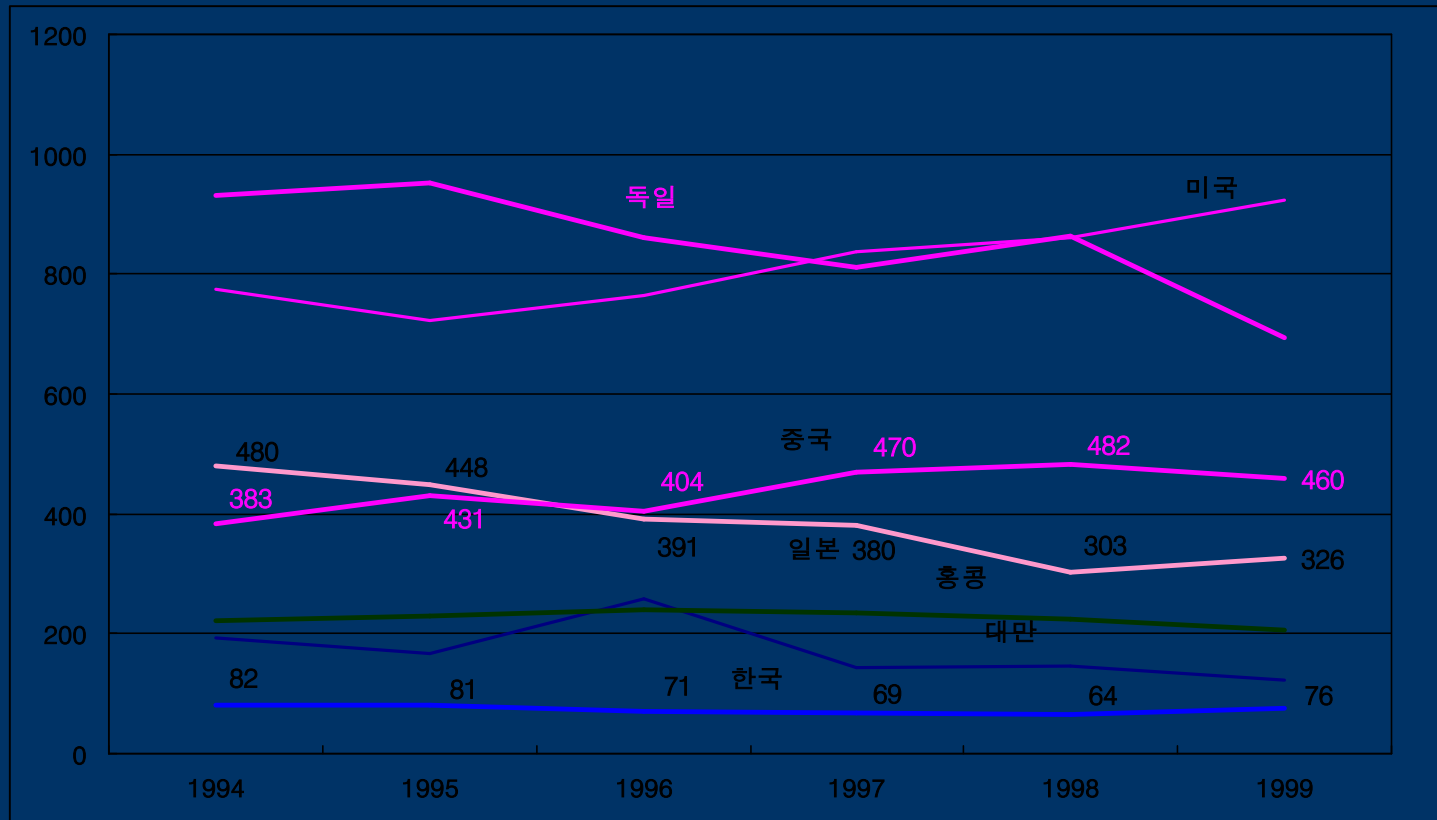
중국경제에서 외국인 투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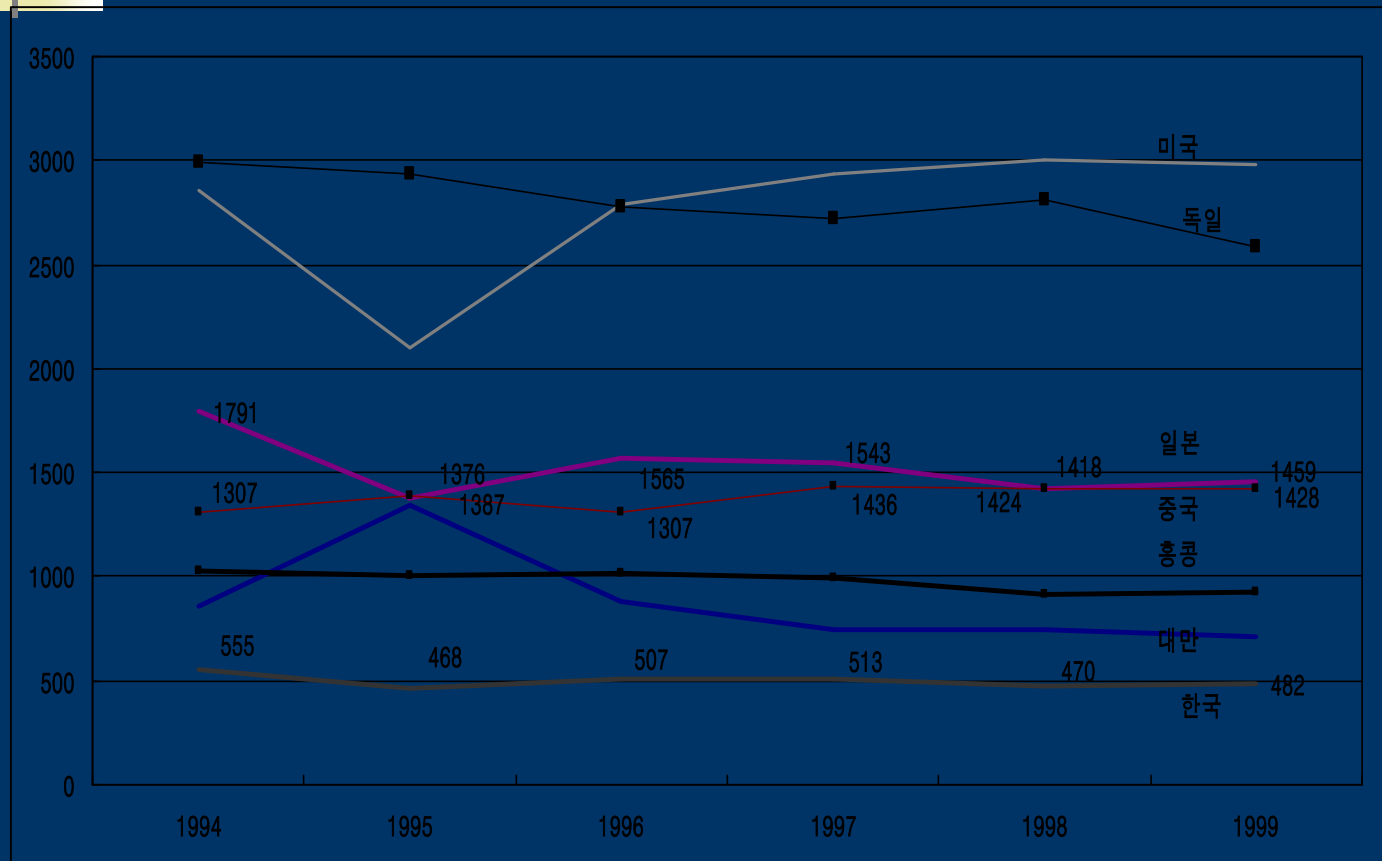
주요국의 경제성장 원천

	한 국 1963-1995		일 본 1953-1971		미 국 1929-1982		캐나다 1950-1967		서 독 1950-1962	
	국민소득	7.61	100.0	8.81	100.0	3.02	100.0	4.95	100.0	6.3
요소투입	4.27	56.1	3.95	44.8	1.91	63.2	3.02	61.0	2.8	44.4
노동	2.96	38.9	1.85	21.0	1.34	44.4	1.85	37.4	1.4	22.2
자본	1.31	17.2	2.10	23.8	0.57	18.9	1.14	23.0	1.4	22.2
TFP	3.34	43.9	4.86	55.2	1.11	36.8	1.96	39.6	3.5	55.5
기술변화	1.47	19.3	1.97	22.4	0.66	21.9	0.66	13.3	0.9	14.2
자원배분	0.45	5.9	0.95	10.8	0.23	7.6	0.64	12.9	1.0	15.8
환경	-0.02	-0.3	-	-	-0.04	-1.3	-	-	-	-
규모의경제	1.44	18.9	1.94	22.0	0.26	8.6	0.66	13.3	1.6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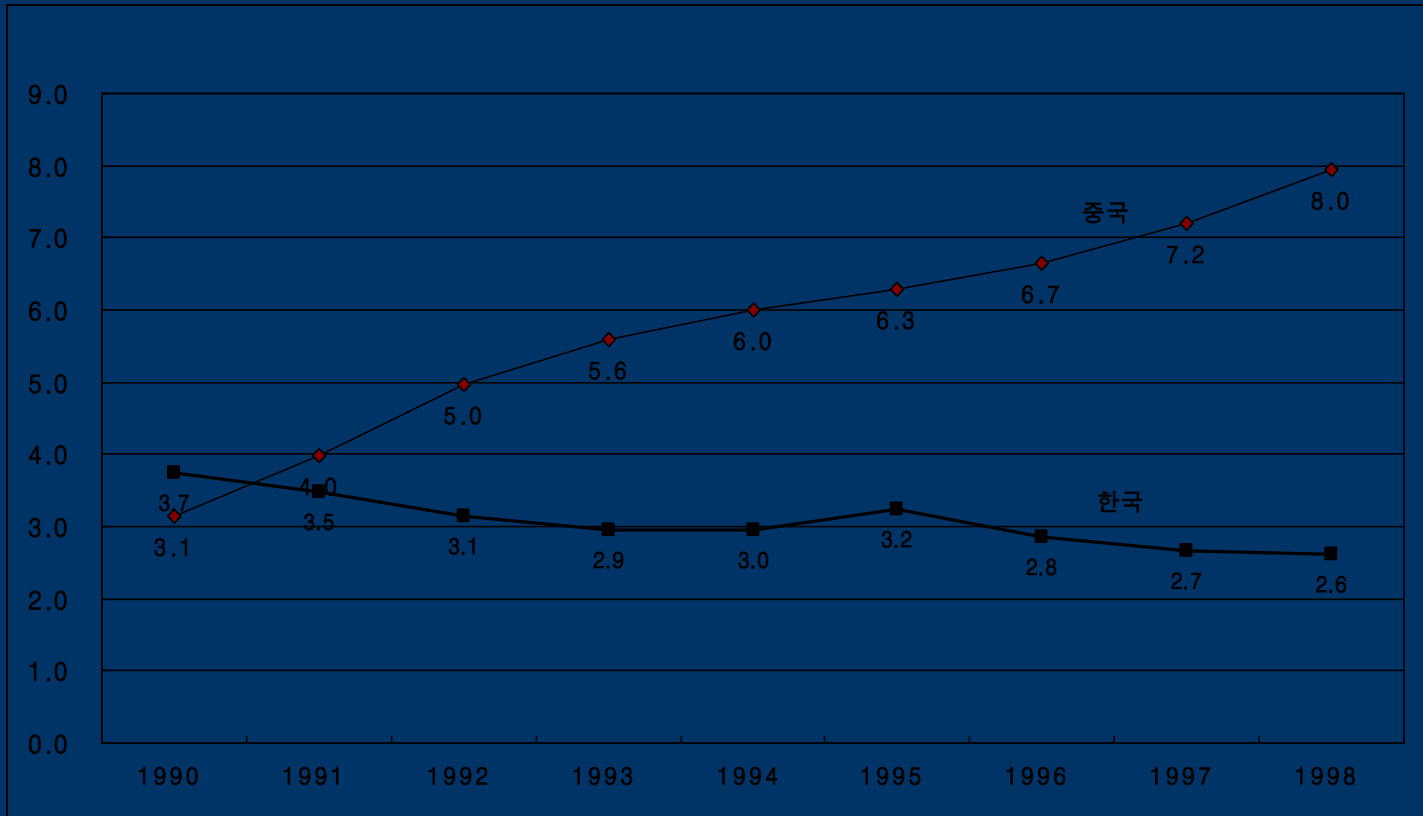
세계시장 1위 품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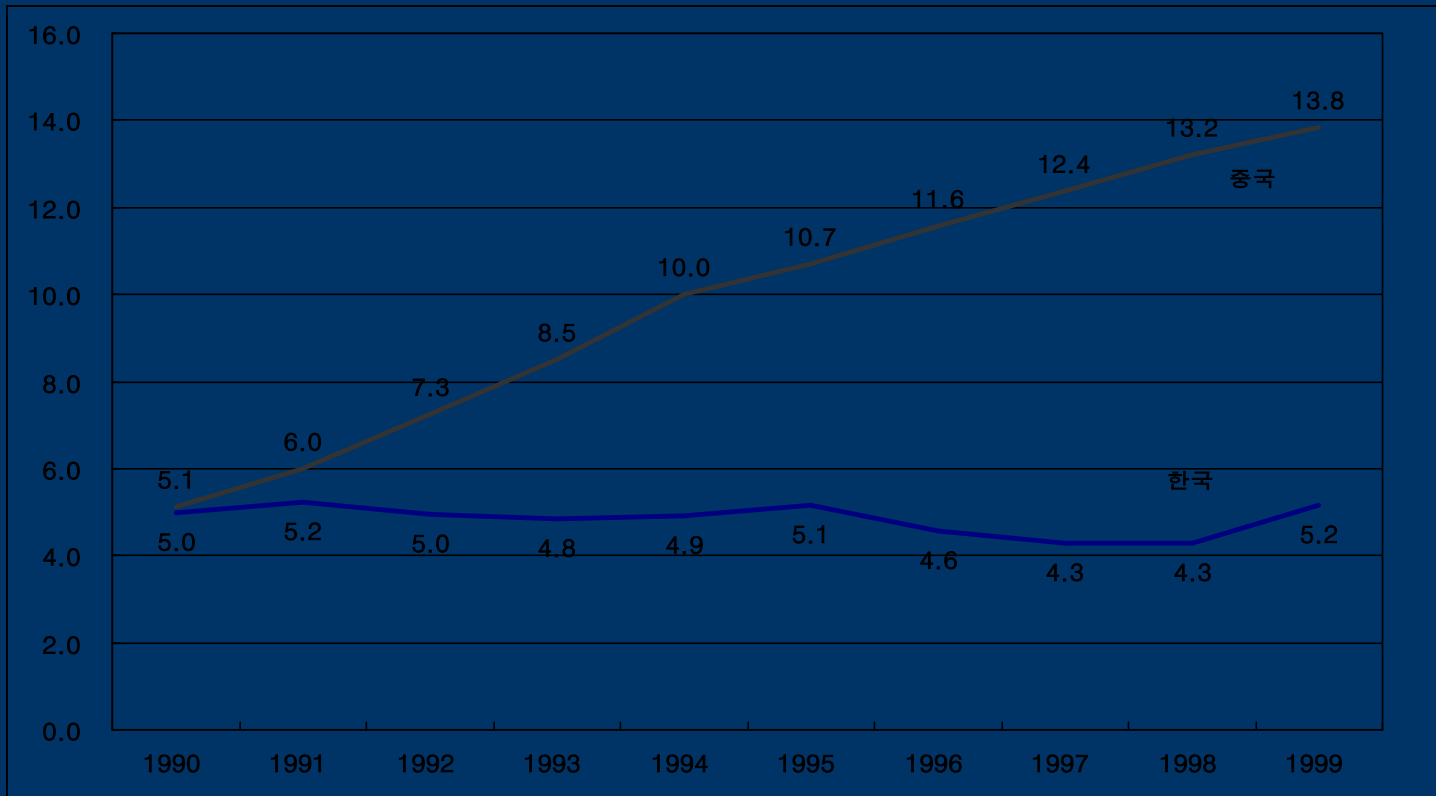
세계시장 1-5위 품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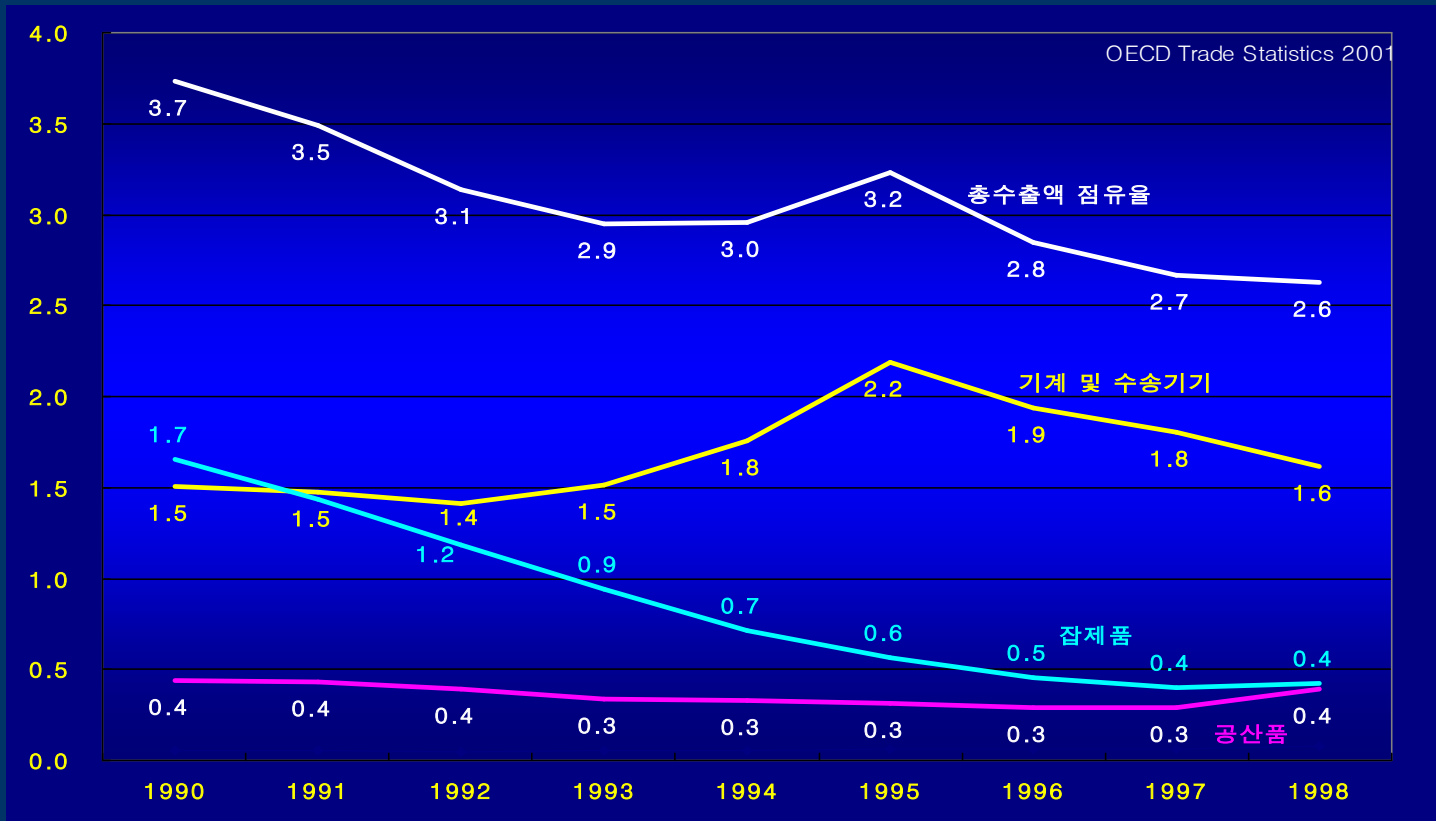
미국시장 점유율



일본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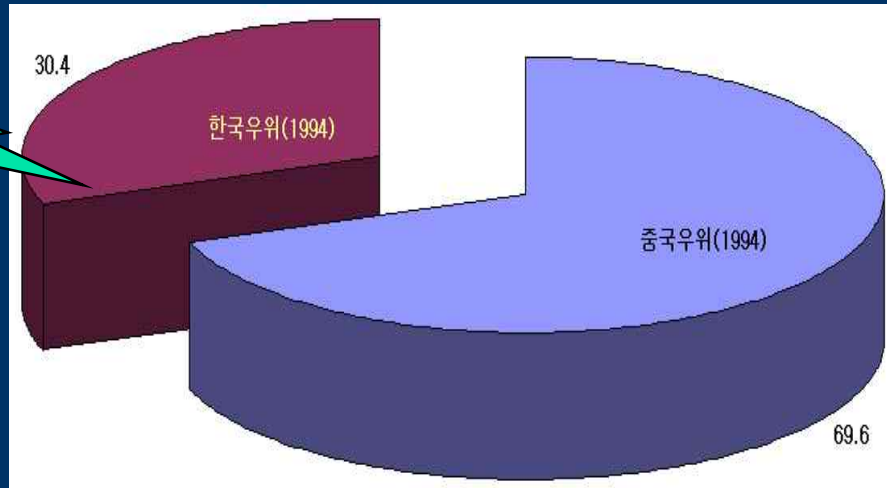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품목별 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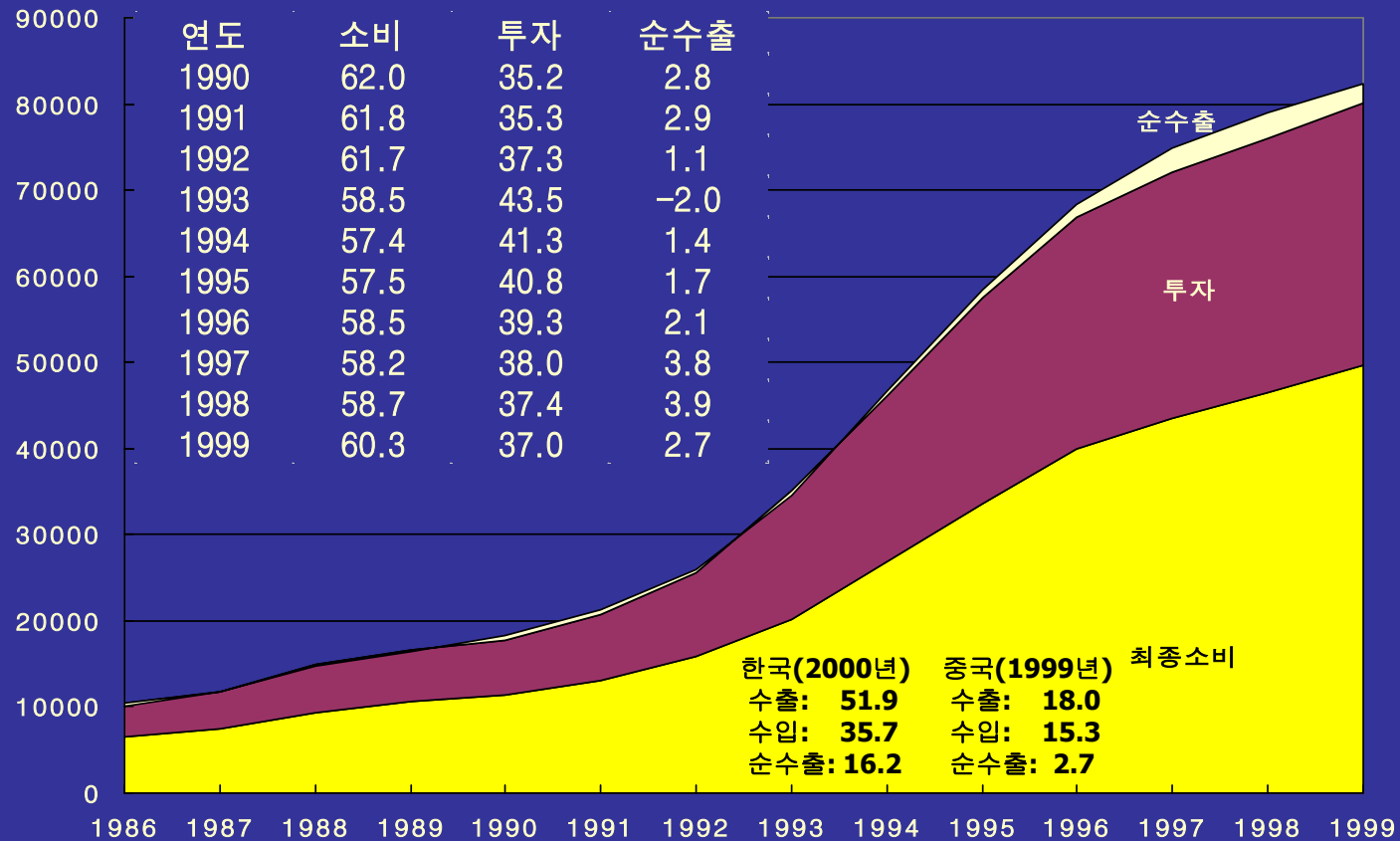
한·중간 경쟁력 역전현황(199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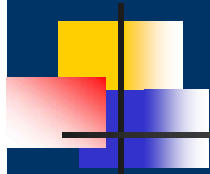


세계시장 경쟁력 역전품목
 석유화학(일부), 사•직물•의류(일부), 신발, 가발, 백미러, 철강제품(일부), 면도기, 기계류(일부),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불도저, 섬유기기(일부), 타자기, 컴퓨터, 사출성형기, 변압기(일부),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 유선전화기, 헤드폰, 녹음기, 전축, VTR, 비디오테이프, 철도신호기, 축전기, 전기제품(일부), TV브라운관, 다이오드, 감광성반도체, 디지털모노리스크, 하이브리드 직접회로, 전자집적회로, 컨테이너, 자동차완충장치, 안전벨트, 기어박스, 차량에어컨, 트레일러, 행글라이더, 영사기, 레이저기기, 의료기(일부), 볼펜, 만년필, 라이터, 악기, 스키, 낙시바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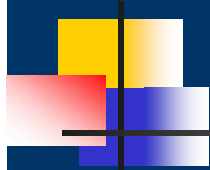
중국의 GDP구성과 수출





(2) 자본동원의 차이와 추급

- 정부의 적극적 자금지원
 - 목표지향적 경제개발 계획
 -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26.6%)
- 외국인 직접투자 활용
 - 외국기업과의 합작 합자를 통한 직접투자 유치
 - 한국은 정부의 외자도입에 의한 신용할당정책
- 보다 빠른 추급 가능한 전략
 - 기술추급(catch-up)에 보다 유리한 전략
 - 중국의 대규모 시장과 기술을 바꾼 결과(市場換技術)



한국의 경제성장요인의 분해결과

기간	부가가치	노동 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합계	국내 자본	해외 자본	합계	규모의경제	가동률	인적 자본	국내 기술	외국 기술	기타
1970	7.5	2.3	4.2	2.7	1.5	1.0	2.3	0.9	0.1	0.9	0.3	-3.5
-81	100.0	30.4	56.5	36.0	20.5	13.1	30.5	12.4	2.0	11.8	3.8	-47.3
1981	9.1	1.7	4.6	3.5	1.1	2.8	1.3	1.0	0.3	1.2	0.2	-1.4
-90	100.0	18.6	50.9	38.7	12.2	30.5	14.6	11.3	3.7	13.6	2.6	-15.2
1990	7.7	1.3	5.11	4.0	1.1	1.3	0.5	0.5	0.4	0.5	0.1	-0.7
-96	100.0	16.7	66.1	52.3	13.8	17.2	6.8	6.6	4.9	6.9	1.5	-9.6
전기간 (1970 -96)	8.1	1.8	4.7	3.4	1.3	1.7	1.6	0.8	0.3	0.9	0.2	-2.2
	100.0	22.3	57.3	41.8	15.5	20.4	19.6	10.4	3.8	10.5	3.0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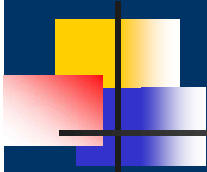
(3) 첨단분야 발전과 안행구조

-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합리화, 시장기능도입
 - 대기업위주 성장전략, 집적화 추진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활용
- 첨단기술분야의 동시 육성
 - 제품주기상 특정분야의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술우위의 상품개발과 시장화 가능
- 외국자본과 기술을 활용
 - 자체 가공조립기술 개발기간 단축
 - 기술추급기간 단축
- 한중일 국제분업구조의 붕괴
 - 급격한 한중일 분업구조(안행구조) 붕괴



(4) 한국 산업에 대한 직접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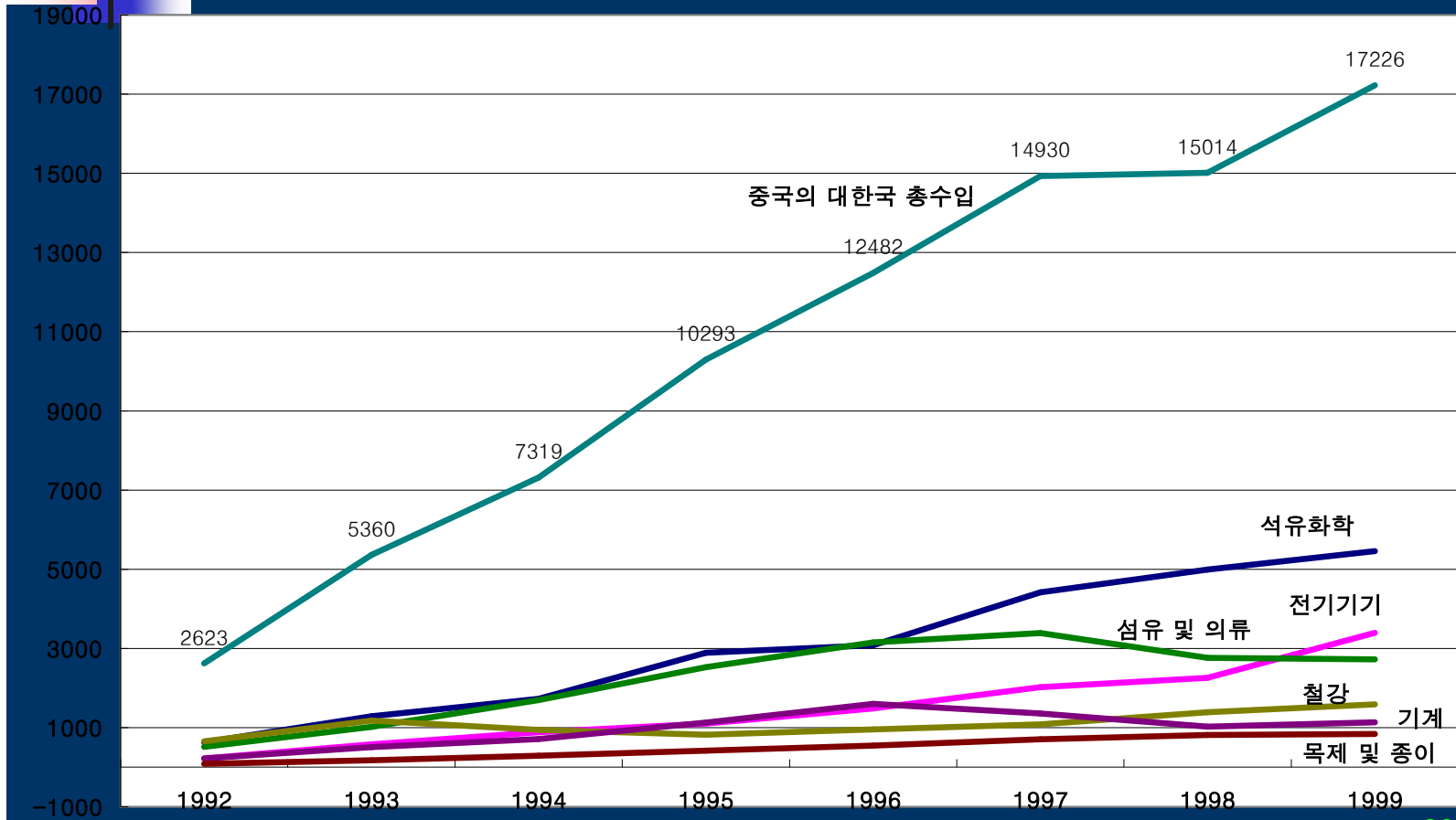
- 무역역조 개선 요구 증대
 - 경쟁력 이상의 일방적 흑자시현
-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자간 분쟁
 - 대중 무역역조 개선 요구시 농산물 분야 수입확대
 - 흑자실현 업종과 적자실현 업종간 이해상충
 - 석유화학업계 이익시현율 저조
- 국내기업의 과잉설비 문제 악화
 - 중국의 기초소재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 국내 석유화학 등 과잉설비 문제 악화
- 대체시장 확보 불가능
 - 대중 흑자 급감시 대체시장 확보 불가능



중국의 주요국과의 무역수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미국	-307	6,277	7,568	8,595	10,528	16,414	21,065	22,469
일본	-2,004	-7,512	-4,748	-538	1,705	2,844	1,385	-1,353
한국	-218	-2,500	-2,917	-3,605	-4,982	-5,803	-8,763	-9,419
대만	-5,172	-11,469	-11,843	-11,686	-13,378	-13,044	-12,762	-15,577
홍콩	16,979	11,603	22,919	27,393	25,080	36,793	32,084	29,971
독일	-1,567	-2,073	-2,376	-2,366	-1,481	316	334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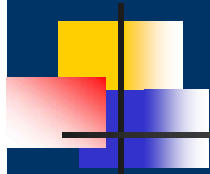
주요산업 대중국 수출추이



무역역조개선과 국내산업간 이해 충돌

대중국 20대 수출품목

HS	품목
271000	석유, 역청유
854030	기타 음극선관
854011	칼라 브라운관
854219	세라믹 반도체
390210	폴리프로필렌
390330	ABS 수지
290250	스티렌
540742	염색 직물
390110	폴리에틸렌 (비중 0.94미만)
390120	폴리에틸렌 (비중 0.94이상)
291736	테레프탈산
550320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852290	녹음기, VTR
481012	종이
847330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8471호에 해당)
721913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
390319	기타의 폴리스티렌
410439	가죽
481011	종이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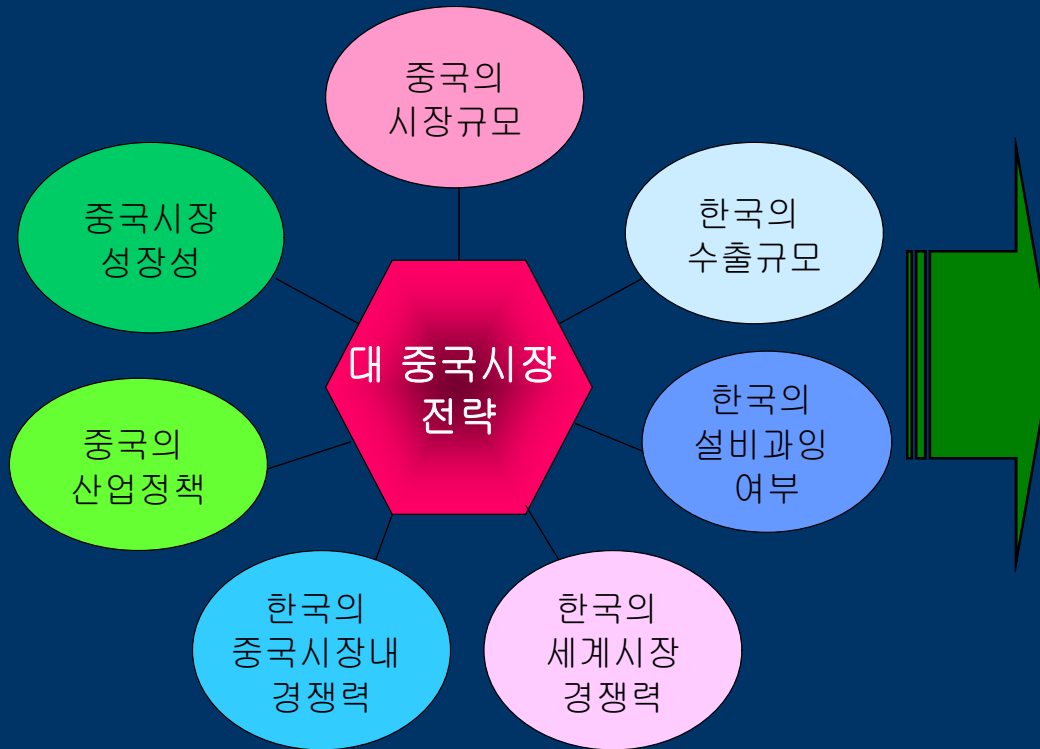


(5) 대중국 진출 기회확대

- 10.5계획기간 중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로 기회확대
 - 중국측 필요에 의한 외국인 투자우대 기간
 - 한국측의 주요 전통산업 이전에 적기
 - 이전가능 전통산업의 기술우위
- 10.5계획기간 이후 중국진출기회의 지속적 감소
 - 주요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후 우대조치 중단
 - 주요 공단의 입주 완료
 - 전통산업에서 한국의 기술우위 소멸
 - 기술이전없는 단순한 설비이전 불가능

IV. 한국의 대응

다양한 전략의 활용



- 직접투자
- 기술이전
- 합작·합자
- 전략적 제휴
- 수출확대

-중국시장 활용과 평가요인-



합작·합자 모델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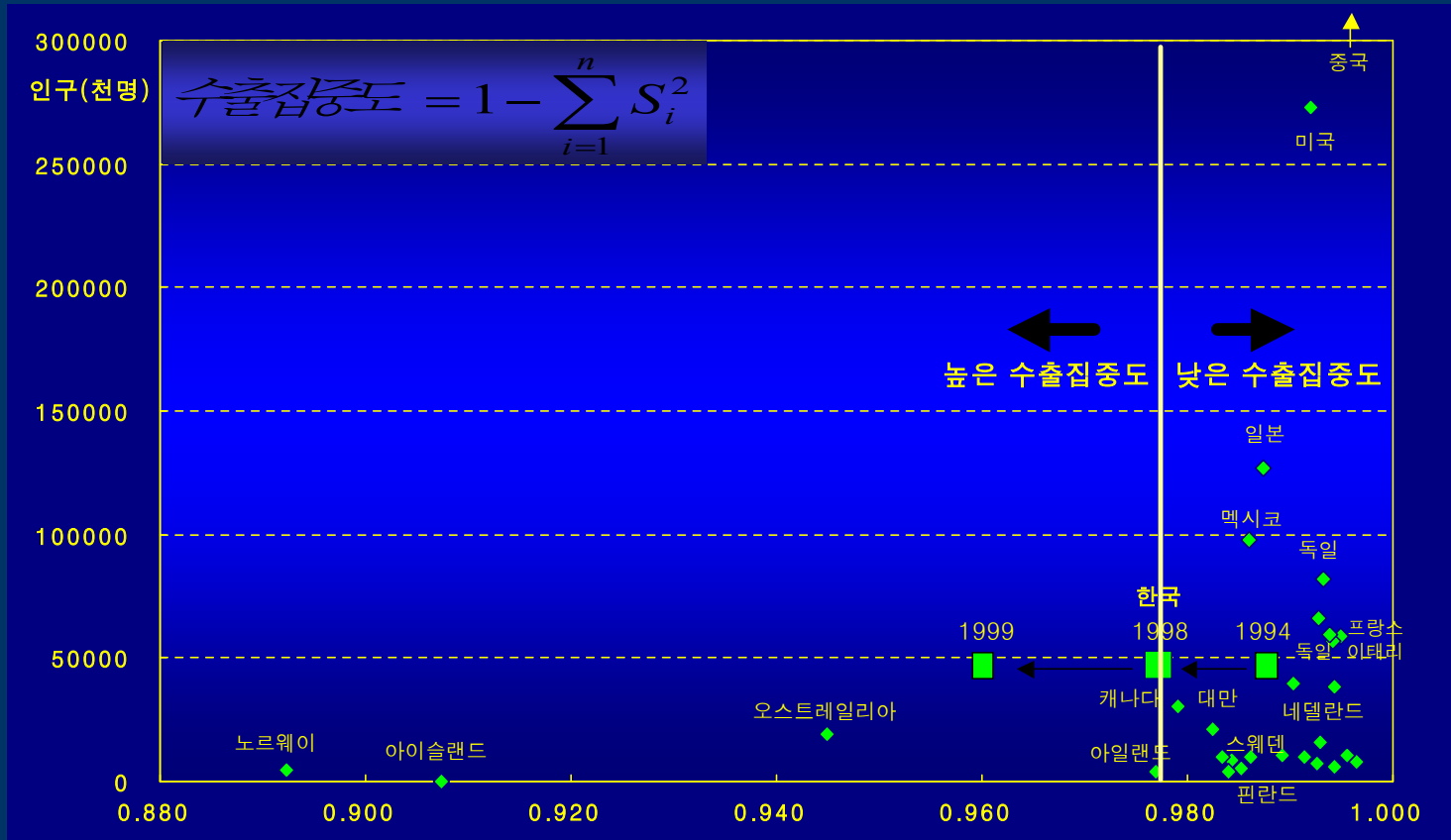
- 국내 과잉설비 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안
 - 국내과잉부문의 이전(중국내 독자설비증설 억제)
 - 국내과잉부문의 다운스트림 분야(국내원자재 활용)
- 시장선점 및 현지화를 위한 방안
 - 10.5계획기간 이후 진출기회 감소
 - 합작·합자를 통한 현지화
 -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으로 활용
- 국내 내수시장
 - 무역역조 해소
 - 부품조달을 통한 원가절감
-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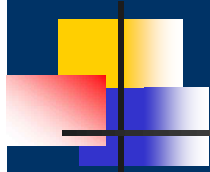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미래신산업 육성

- 기존 전통산업의 획기적 구조조정
 - IT와의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제고
 - 설비이전(향후 5년간이 마지막 기회)
 - 대중국 상대적 기술우위
 - 중국의 산업정책
 - 지속적 경쟁력 유지를 통한 Cash Cow역할 수행
- 전통산업 내에서 구조조정
 - 기존 주력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구조조정
 -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에서의 산업 내 구조조정
- 미래 신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준비
 - NT, IT, ET, CT, BT 분야 중 전략기술 개발
 - 지식기반 서비스업
 - 기반기술 R&D 분야에 정부의 선택과 집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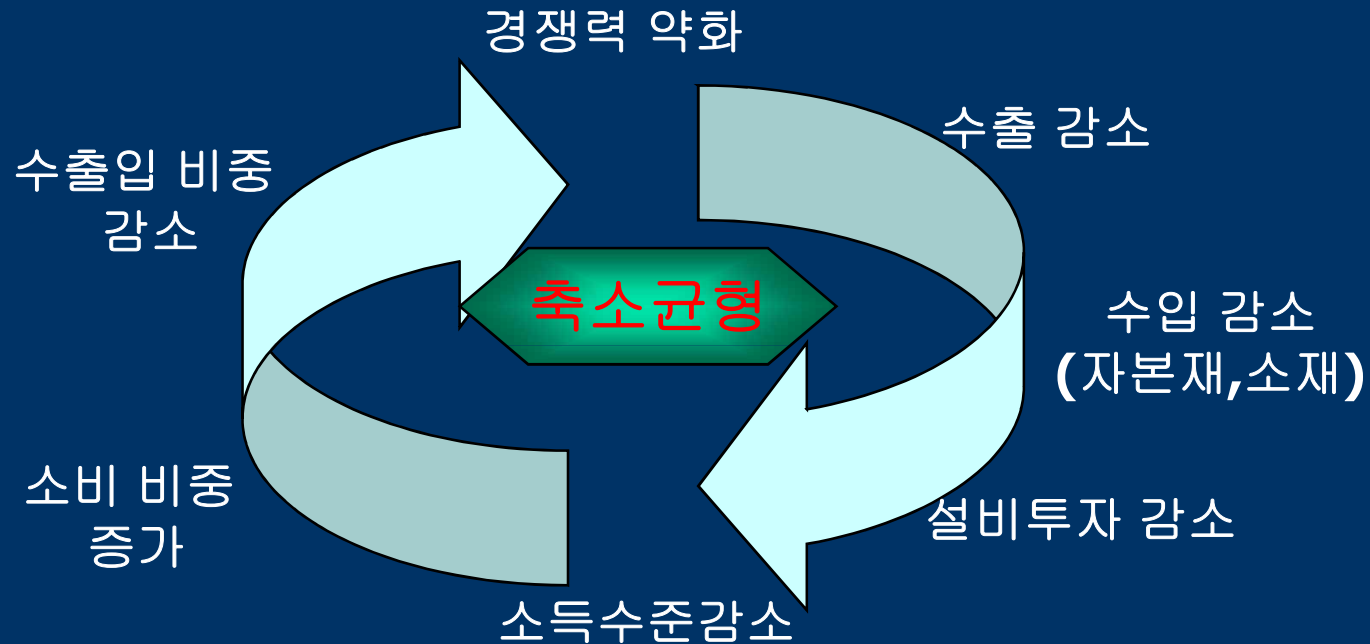
주요국의 수출 집중도와 인구규모

(선택과 집중의 함정)





한국경제에서 선택과 집중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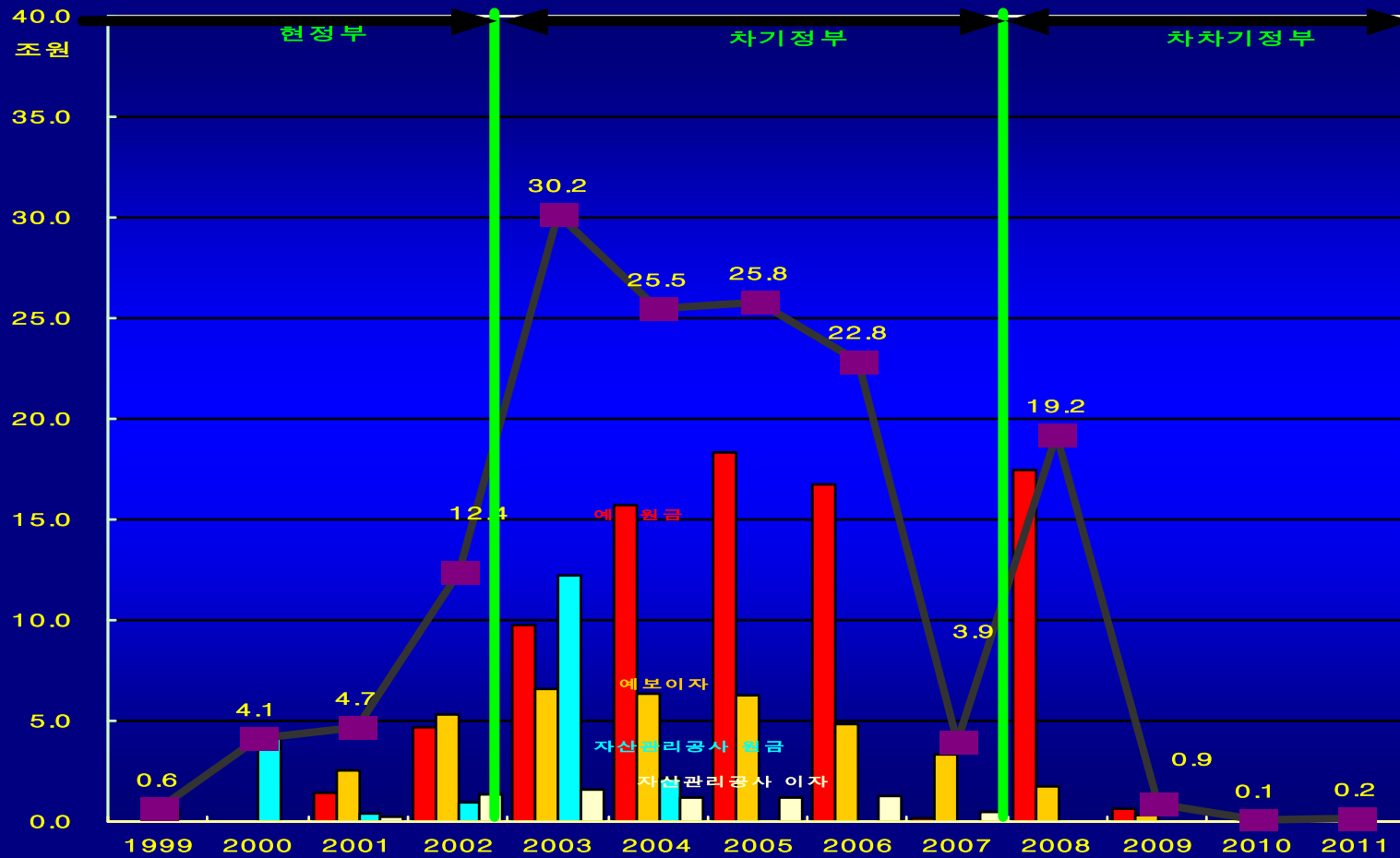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국민소득} &= \text{소비} + \text{투자} + \text{정부지출} + (\text{수출} - \text{수입}) \\ \text{GDP} &= \text{C} + \text{I} + \text{G} + (\text{X} - \text{M}) \\ (\text{구성비}) & \quad 59.0\% \quad 25.5\% \quad 8.6\% \quad 51.9\% \quad 35.7\%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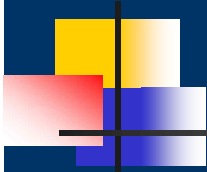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성장원천과 고용

- 경제성장율 : 5-7%
- 경제활동인구(입직자수) : 40-60만명
- 취업자수의 증가 : 35-50만명
- 노동분배율 : 57-63%
- 노동투입의 경제성장기여도 : 20% 내외
- 경제성장율 1%당 취업자수와 실업률
 - 1%당 약7만명 고용능력 감소
 - 1%당 약0.5%실업률 증가
- 경제성장의 축소균형과 위험성

정부의 남은 힘





기대와 우려

□ 8.15 경축사, 정재계간담회

- 3년내 200만 일자리 창출
- 세계 1등품 매년 100개씩 5년후 500개 창출

□ 의미

- 경제성장을 3년간 매년 10% 혹은 15%
- 세계1등품수로 보아 세계 2위 경제대국 달성
 - 한국 500개(99년 76개)
 - 미국 924개, 독일 694개, 일본 326개, 영국 121개, 프랑스 203개, 대만 122개('99년)

□ 기대? 무지?